

전남 조선·해양산업, AI·친환경 전환…미래 설계 나섰다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

지·산·학·연 15개 기관 협력

AX 대응전략 제시…비전 논의

전남 조선·해양산업이 AI와 친환경을 축으로 한 산업 전환에 본격 나섰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분야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혁신과 상생 발전을 선언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17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9일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영암·목포·해남 등 서남권 지자체 관계자, 조선·해양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혁신 방향과 협력 전략을 공유했다.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은 2008년 전남 조선산업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선언하며 연례축 10주년 달성 비전을 선포한 것을 기념해 지정된 행사로, 매년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



지난 19일 목포대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계호 국회의원, 우승희 영암군수 등 주요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행사 1부에서는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자동화 생산설비 개발과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산업 혁신, 스마트 항만 장비 납품, 친환경 선박 개발 등에 기여한 산업 관계자들이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과 전남도지사, 시장·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전남도와 시군, 대학, 연구기관

등 15개 기관은 ‘전남도 조선산업 미래혁신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 △친환경 전기선박 클러스터 조성 △합정 MRO(유지·보수·정비) 전주기 허브 구축 등 새 정부 국정 기조와 연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참여 기관들은 기술과 인력, 시설, 정보를 공유하며 산업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조선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공동으

로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기술과 경험이 미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산·학·연 연대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2부에서는 허철은 한화오션 고문(전 스마트솔루션연구센터장)이 ‘조선해양 혁신의 방향과 AX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스마트 조선소 혁신 사례와 함께 전남 조선·해양 기업의 AI 기술

적용 방향, AX 대응 전략이 제시되며 참석자들과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조선·해양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쳐 온 핵심 주역”이라며 “현장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AI·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남을 미래 조선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조선산업에는 300여개 기업과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인력의 94% 이상이 목포·영암·해남 등 서남권에 집중돼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 대표 기업인 HD현대삼호는 올해 3분기까지 1조4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어가는 등 전남 조선산업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서전·정책집 동시 출간

‘말보다 책임’ 45년 행정·정치 여정 담아

재생에너지·국립의대 등 전남 정책 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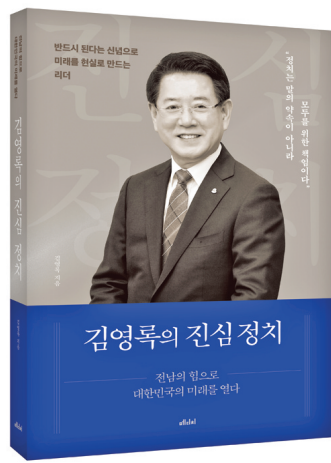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자신의 45년 공직과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가슴 깊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두 권의 자서전에 담아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책임으로 길을 만든 리더의 이야기를 담은 ‘김영록의 진심 정치’와 지역을 아끼고 사랑을 돌보는 리더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정책집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윤현석 전남도 정책수석 공저)을 발간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철학과 행정가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김 지사의 두 저서는 22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서전 ‘김영록의 진심 정치’는 공직 27년과 국회의원·장관·재선 도지사에게 이르기까지 45년의 행정·정치 여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고향 전남 완도에서의 성장기, 공직 입문과 지방행정 책임자 시절의 판단, 중앙정치와 장관 재임기의 정책 선택, 전남도정 운영 과정의 주요 국면을 시간 순으로 담았다. 책은 ‘말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한다.

정책집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은



전남도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을 분야별로 압축했다.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단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농어민·소상공인·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밀착형 정

책, 관광·바이오·해양 산업 육성, 무안국제공항 거점화와 철도·항만 확충 전략 등을 정리했다. 정책의 배경과 추진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77년 제21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관선 강진군수와 완도군수를 거쳐 전남도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로 일했고, 행정자치부에서 홍보관리관을 지냈다.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고,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선 전남도지사로 일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노후화’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논의 속도

조석호 시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테마파크 전환 논의

노후화된 시설과 적자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패밀리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광주형 테마파크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석호 광주시의원(사진)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진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혁 테마파크공작소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석호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문용 ESG위원회 위원장, 조석현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성장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패밀리랜드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혁 대표는 “광주 패밀리랜드는 시민



조석호 시의원

의 대표 여가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태·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도시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와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도심형 공공테마파크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며 “광주역사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체제와 야간·계절형 콘텐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조석호 의원은 “광주 패밀리랜드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휴식과 도시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패밀리랜드가 시민 속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인문학·예술·비엔날레’ 문화도시 조성

시, 문화거리 3곳 신규사업 추진

회계 222억 확보…전년비 29% ↑

인문·문화·산업 전반 동력 마련

광주시가 인문학과 예술, 광주비엔날레를 잇는 ‘3대 문화축’을 새로 조성한다.

인문학 산책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트 예비뉴, 광주비엔날레 스트리트 등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문화거리를 만들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성장동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사업(아특회계)’으로 국비 22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도 국비 172억원 보다 29%(50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주시는 아특회계 사업을 통해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9건을 추진한다.

이번 아특회계에는 인문학 산책길 조성(1억원), ACC 아트 예비뉴 조성(2억원), 광주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1억원) 등 대표 문화거리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됐다.

‘인문학 산책길 조성사업’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속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 인문학적 줄거리(스토리라인)를 구축, ‘인문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트 예비뉴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로변을 특화문화거리로 조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광주공원 등 문화거점을 연결해 하나의 문화축을 형성한다.

‘광주비엔날레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8년 광주비엔날레 신(新) 전시관 개관에 맞춰 광주비엔날레 스트리트 등 관광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 건립 사업에는 55억원이 반영돼 2026년 착공할 계획이며,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45억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운영(6억원) 등 문화기반 확충도 지속된다.

또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에 맞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14억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10억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8억8000만원),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4억원) 등 8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당, 내란재판부法 23일 상정·24일 처리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

필버 거쳐 본회의의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 직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직후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위원회이란 지적

에 내부인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앞서 대법원이 제정하겠다고 밝힌 예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법 제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이 어긋나므로, 예규와 법령 내용이 배치되면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오영순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 행정 지원 강화해야”

본회의의 5분 발언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원 정책 주문

오영순 광주 남구의원(사진)은 19일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압촌·지석·대지·석정동 일원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전략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스마트 에너지 산업 특화단지”라며 “해당 단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구의 미래 전략 산업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단 조성 이후 기업 유치와 정착을 위한 생활·행정·기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입주 기업들은 교통 접근성 부족, 노동자 편의시설 미비, 산업단지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순 남구의원

그러면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성장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과 남구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노동자 편의·문화·체육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 대학·특성화고 연계 현장 실습, 청년 창업 프로그램 및 일자리박람회 연계 등에

너지 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